

‘경선 반환점’ 민주 주자들, 정책 행보로 표심잡기

후보들, 현장간담회·공약 발표 분주
이재명, ‘상법 개정’ 개미표심 잡기
김경수 “검찰청 폐지·병역제도 개편”
김동연, ‘성평등 선진국’ 여성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당 주자들은 현장 간담회와 공약 발표 등으로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개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개미 투자자들은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한 중도층에 가까운 만큼 본선을 앞두고 표의 확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다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선에 승리할 경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며 “집안의 규칙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나”라고 되물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두고는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있다”며 “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관련 정책을 공개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는 검찰청 폐지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는 병역제도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제시했다.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규모와 권한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정치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사법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군과 관련해서 징병과 모병 혼용제 개편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군 상비병력 규모를 35만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도 약속했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 가구 기준 약 96만원의 최소생활비를 보장되 중위소득 40~100%의 국민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결선 투표제와 연합공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 “검찰의 경우 기소청을 따로 떼는 등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기득권을 완전히 빼앗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겨냥해서도

“기재부는 재정 기능을 떼어낸 재정 부분과 기획예산처로 분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하는 여성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대학생 등과 ‘성평등 선진국’에 대해 소통하며 여성 표심을 공략했다.

김 후보는 여성 공약을 공개해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여성계의 숙원이자 논쟁적 사안인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됐는데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 ‘젠다’ 언급 자체를 삼가는 이 후보와 대조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여성 정책으로 성평등 임금 공시제 법제화와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낙태죄 개선 입법,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등도 제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관세전쟁’ 대책 논의…韓 대행 견제

통상안보 TF…수권정당 강조
“파면된 정권 감당할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전쟁에 불을 지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세 정책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수권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TF 단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중 전 당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이 맡았다.

이번 TF 가동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관세 협상 국면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국과 협상에 나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권 행보를 견제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단장은 회의에서 “미국은 무역과 방위비, 에너지 환율 등 다양한 이슈를 패키지로 묶어 각개전과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자원을 가동하는 고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졸속 협상하는 측이 반드시 패자가 된다”며 “국가 간 협상은 ‘나쁜 협상’을 하느니 타결하지 않는 게 훨씬 좋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시범 케이스로 우선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결국 미국의 전략에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한 대행을 겨냥한 메시지도 이어졌다.

김 단장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그 권한과 정당성 모두 단기·임시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대미 관세 협상의 속제는 ‘윤석열 리스크’에 이은 ‘한덕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대선출마와 자기 장사에 몸이 단 한 대행이 뭐라고 하든 신중히 국익을 지켜 세 정부에게 넘기는 게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 등 모든 실무 관계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형배, 한국문화기술 연구원 설립법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21일 문화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한국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항공우주기술(ST) 등의 분야는 전문기관이 있지만, 문화기술(CT)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 연구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설립을 추진해 지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책연구기관 통폐합을 이유로 흐지부지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CT연구원이 아닌 CT연구소라는 이름만 유지해 적은 예산과 비전문적 운영으로 전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민 의원은 “최근 ‘지브리 밈’ 열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이 결합될 때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K-문화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인 CT 연구원 광주 설립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재하는 황우여 선관위원장
고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위원들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경선 ‘4강’ 오늘 발표…주자들 총력전

김문수·홍준표, 복지공약 발표
한동훈·나경원·안철수, TK행
양향자, ‘광주의 딸’ 지지 호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21일 부터 이틀동안 ‘4강’을 가리기 위한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여론조사에서는 당 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묻는 만큼, 후보들은 민생·정책 현안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선 후보에 맞서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낼 적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구상’ 공약을 소개하며 경기도지사로서 시정 운영 경험을 부각했고, 홍준표 후보는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 해결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공방 과정에서 부각된 강성 보수 이미지를 희석하고 중도·무당층에 어필하기 위한 전략으

로 해석된다.

한동훈·나경원·안철수 후보는 당의 전통적인 ‘뒷밭’인 대구·경북(TK)을 찾아 보수 지지층 공약에 주력했다.

한 후보는 경북 경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예정지를 찾았고, 나 후보와 안 후보는 대구에서 기자회견과 대학 및 재래시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했다.

유정복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며 개혁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후보는 이날 광주를 찾아 ‘탄핵 반대(탄반) 국민의힘 후보들은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후보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국립트라마치유센터, 광주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을 찾아 ‘광주의 딸’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주자들은 2차 경선의 ‘4자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주시하고 있다.

경선 초반 레이스는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 ‘3강’, 안철수·나경원 후보

‘2중’의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안 후보와 나 후보가 4강의 마지막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는 해석이다

4강에 나 의원이 진입할 경우 ‘탄핵소추 반대파’(김문수, 홍준표, 나경원)와 ‘탄핵소추 찬성파’(한동훈) 간의 3대 1 구도가 형성된다.

이 경우 ‘반탄파’의 표가 분산되면서 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4강 안에 안 의원이 들어간다면 ‘탄핵소추 반대파’와 ‘찬성파’ 간에 2대 2의 팽팽한 구도가 만들어지며 접전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양향자, 유정복 후보 등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둔 개혁 성향의 새로운 인물들이 바람을 불러올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22일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다.

서울=김선욱 기자